



한국기업의
버마가스개발에 의한
버마인권침해 우려 표명 및
인권존중 촉구를 위한
공동행동 자료집

독毒 나무에는 물을 주지 마라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시민행동



미얀마? 아니 버마!

민주화의 요구를 피로 마감하며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9년 버마 군사정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꿔보고자 나라이름을 '버마' 에서 '미얀마' 로 바꿨다. 그러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버마 국내외에서는 '버마' 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독壽나무에는 물을 주지 마라

한국기업의 버마가스개발에 의한
버마인권침해 우려 표명 및 인권존중 촉구를 위한
공동행동 자료집

차례 >>>

- 2 여는 글
- 4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개발 사업 일지
- 7 개발가스의 예상 운송경로
- 8 한국 내 활동경과
- 9 버마 아라칸 사람들의 요구
- 10 사진자료(ANC 사진)_ 지금 가스개발지 아라칸에서는
- 12 대우 가스개발의 현장, 아라칸을 가다 (한수진)
- 16 가스개발로 위협받는 버마의 인권과 환경 (Carol Ransley)
- 22 군사정권과의 협력은 이제 그만 하셈! (조샤린)
- 26 사진자료 (Earthrights 사진)_ 군사정권 하의 버마인들의 삶
- 30 버마의 민주화와 외국인투자, 그리고 한국 (박은홍)

따뜻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버마땅이지만
여전히 군사독재가 지속되고 있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어렵다.

국제시민사회에서는, 버마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이 '야만적인' 버마군사독재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문제제기 해왔다. 게다가 버마정부가 천연자원 등을 개발하여 얻는 이익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구입 등 군사정권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계속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90년 버마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지만 2005년 지금까지도 군부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지 못한 버마의 민주화요구 세력,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로 대표되는 NLD(민족민주동맹)정당과 소수민족들 역시 위와 같은 주장 하에서 해외기업에게 버마민주화가 될 때까지 투자를 멈춰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독재와 투자,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인권을 무시한 투자는 어떤 얼굴을 할 것인가?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는 이웃나라에 가서 돈만 벌어오면 되는가? 이윤만 생각하고 노동자들의 삶이야 어떻게 상관 안하는 기업주나 한국에 와서 돈만 챙기고 직간접으로 피해를 남기는 외국기업에게는 쉽게 비난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이 될 우려를 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있으면 귀 기울여 봐야 하지 않는가?

버마민주화를 요구하는 '영국버마캠페인' (The Burma Campaign UK)과 국제자유노련(ICFTU)은 버마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더러운 리스트' (dirty list)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한국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2000년 버마 정부는 버마북서부 해상 광구 개발사업의 해외입찰을 실시하였다. (주)대우인터내셔널이 개발권을 따내어 2005년 현재 A-1광구에 대한 지분은 (주)대우인터내셔널 60%, 한국가스공사 10%, 인도국영석유공사 20%, 인도국영가스공사 10%이다. 2003년 11월 A-1광구 일명 '쉐'(Shwe, 버마어로 황금이라는 뜻)에 대한 시추에 성공하여 상당량 가스전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2005년 현재는 정밀매장량확인개발계획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90년대 초반 이미 프랑스의 토탈(Total)과 미국의 유노칼(Unocal)사가 버마 가스개발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가스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버마군사정권에 의한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강제노동, 성폭행 등의 심각한 노동, 인권, 환경침

해가 있어 큰 논란이 되었다.

버마상황과 이전의 유노칼 사례를 볼 때 한국기업이 관련된 가스개발 과정에서 이전과 같은 인권침해가 직간접으로 다시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쉐 가스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버마서쪽 해상과 가까운 아라칸 지역에 군인이 늘어나고 있고 강제이주와 토지몰수, 강제노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들려오고 있다. 정보접근도 차단되어 있어 강제노동을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버마에서는 기업활동이나 투자가 곧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더 나쁘게는 일한 댓가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가스를 비롯한 많은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미얀마현지주민들은 그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가 없다. 최근 아라칸을 다녀온 한국인들은 하루에 제한된 시간에만 전기가 들어오고 컴퓨터를 전공한 대학생들은 전기가 부족해 컴퓨터 실습을 해 본적이 없다고 전한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며 잘 나가던 한국의 한 기업가가 독재정권에서 장사해먹기 가장 좋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밥을 먹고 있는가?

우리가 걱정하는 자본의 어두운 모습은 나 자신의 모습 역시 어느새 그렇게 만들어 버릴지 모른다.

‘무한질주’ 하는 자본을 비판하는 나의 등 뒤에 원망하는 친구가 서 있을지 모른다.

이제 거울을 보자. 우리가 비춰지는 거울 속에 이웃의 친구를 세워보자. ■





경과

2000년 8월 10일

버마 국영 석유가스개발공사와 석유광구 독점탐사 계약 체결

버마 북서부 인도양 벙갈만 A-1광구의 독점 탐사 계약을 체결. A-1광구에는 원유 5억 배럴과 가스 3조 입방피트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100억 달러(약 11조1500억원) 상당 규모이다. 100%지분을 가진 운영권자로서 4년간 200억원을 투자하여 3단계의 본격적인 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2000-08-11

2001년 11월 30일

한국가스공사와 공동 광구 개발 계약 체결

A-1광구에 대한 지분 10%를 한국가스공사에 넘겨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A-1 광구의 가매장량을 10조 입방 미터로 보고 탐사에 들어간 상태. 매일경제 2001-12-03

2002년 1월 28일

공동 투자자로 인도석유공사(ONGC)와 인도가스공사(GAIL) 유치

지분 90% 중 20%를 인도석유공사에, 10%를 인도 가스공사에 양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분 양도 후에도 지분 60%를 보유하는 대주주로 남고 탐사 운영권자로서 탐사사업을 이끌게 된다. 매일경제 2002-01-28

2004년 1월 15일

대형 광구 발견

2003년 11월 시추를 시작한 A-1광구 '쉐(Shwe)' 유망구조 탐사정에서 지하 2930~2988m 구간에서 58m에 이르는 두꺼운 가스층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추정되는 채굴 가능한 매장량 규모는 약 4~6조 입방피트로, 원유 환산 7~11억 배럴, 액화천연가스(LNG)로는 800만~1억2000만 t 규모이다. 매일경제 2004-01-15

2004년 2월 12일

2010년부터 매년 수익 1000억원 이상 기대

대우 인터내셔널은 A-1광구에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스를 생산할 것이며 2010년부터 약 20년 동안 매년 1000억~15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추정실적은 현재 탐사정 시추를 통해 드러난 A-1 광구의 추정매장량 4~6조 입방피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미얀마 정부와의 협상 등 비용을 모두 따진 경상이익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매일경제 2004-02-12

2004년 2월 19일

버마 정부로부터 A-3광구 개발권 획득

A-1 광구 인근의 A-3광구는 총 면적이 6780km²로 제주도 크기의 3배 정도 규모이다. 자료 분석과 2차원 물리탐사 작업을 끝낸 뒤 오는 2006년 초 가스 부존여부 확인을 위한 탐사정 시추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2004-02-19



2004년 6월 10일

LNG공장 공장설립 검토

버마 정부는 서부 해안지역에 30억 달러 규모 LNG 공장을 대우인터내셔널과 합작으로 설립해 한국과 인도에 공급하고 인도까지 가스관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 인터내셔널측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11일 밝혔다.

매일경제 2004-06-11

2005년 3월 4일

쉐 가스전의 2차 평가정 시추 성공

A-1 광구의 2차 평가정 결과, 초특급 저류층임이 확인 됐다. 이로 인해 잠재가치가 4조~6조원대로 추정되는 쉘 가스전의 상업적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평가정 산출시험에서 일일 생산량 9600만 입방피트의 가스를 시험 생산했으며 2개의 가스층이 광범위하게 분포했음을 재확인하였다. 추가 가스 매장량이 예상되는 '쉐퓨(Shwe phyu)'와 '응웨(Ngwe)' 구조에 대한 탐사정 및 탐사정 성공시 평가정도 시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2005-03-05

2005년 4월 13일

대우인터, 미안마 '쉐퓨'서도 가스층 확인

A-1광구에서 쉘 가스전에 이어 쉘퓨 유망구조에서도 가스층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63.2m 두께의 2개의 가스층이 발견되었으며 가능매장량을 6~11조 입방피트로 추정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2005-04-14

2005년 5월 6일

쉐 가스전의 3차 평가정 성공

A-1광구 내 또 다른 유망구조인 응웨(Ngwe)의 1차 탐사정 시추를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신문 2005-05-07

2005년 6월 3일

쉐 가스전의 4차 평가정 성공

가스층이 쉘 지역 전체에 걸쳐 골고루 분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남서부지역의 정확한 매장량 평가를 위해 6월 중에 평가정을 1개 더 시추할 계획이며 A-1광구의 쉘 가스전에 대한 공인기관의 매장량 평가작업은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인근 쉘퓨 구조는 몬순이 끝나는 올 4분기부터 평가정을 시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2005-06-04

2005년 6월 10일

A-1광구 내 응 웨(Ngwe)구조 가스층 발견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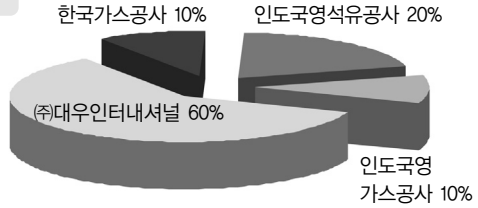
A-1 광구 내 응 웨(Ngwe)구조 남부지역의 1차 탐사정 시추에서 가스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발표했다. 향후 북부지역에서 2차 탐사정 시추 예정이나 이번 결과는 진행중인 쉘(Shwe)구조 매장량 평가에는 영향을 없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2005-06-10

쉐 (Shwe) 프로젝트

지역_ 버마 서북쪽 해상 A-1광구

지분



2005년 7월 29일

미얀마 광구 추가 투자 결정

인도 석유공사 등과 함께 A-1 광구 개발 사업과 관련 지난해 9천만달러에 이어 올해 추가로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난 2분기 매출 1조2천626억원, 영업이익 220억원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일경제 2005-07-29

2005년 8월 22일

미얀마 쉐 가스전 종료

‘쉐’ 가스전 전체에 걸쳐 가스층이 골고루 분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탐사정 1회, 평가정 5회 시추 작업을 모두 마쳤다. ‘쉐’ 가스전에 대한 매장량 평가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외부기간의 공인을 받을 예정이다.

매일경제신문 2005-08-22

2005년 8월 24일

A-3 광구 공동 투자 유치

A-3 광구에 대한 공동 투자자로 인도석유공사(ONGC), 인도가스공사(GAIL), 한국 가스 공사에 지분을 각각 20%, 10%, 10%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A-3 광구사업은 A-1 광구 남쪽에 위치한 A-3 광구(면적 6780km²)를 탐사 및 개발 하는 것으로 최소 3조 입방피트의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추정하고 있다. 투자유치 성공으로 탐사투자비의 상당부분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추후 생산될 가스의 국내외 유망 잠재수요처를 사전에 확보하게 되었다.

매일경제 2005-0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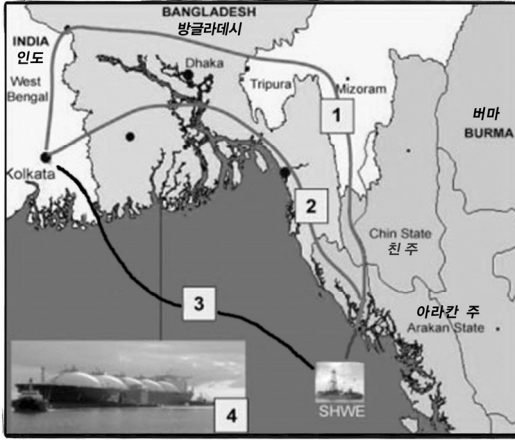
2005년 10월 3일

A-3 공동 투자유치 서명식

인도석유공사(ONGC), 인도가스공사(GAIL), 한국 가스공사와 공동투자유치 서명식을 하고 지분을 매각하였다. 대우인터내셔널은 A-1 광구에 이제까지 약 2억5000만달러를 투자했으며 A-3 광구 개발에는 약 3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일경제 2005-10-03

>>> 개발가스의 예상 운송경로



버마 서부 아라칸 지역의 뱅갈만에 대규모 버마 A-1 광구 가스개발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 경로1의 경우 버마,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육상을 모두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이어서 인권침해/환경파괴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과 정부는 가스 수송 경로를 공개하지 않으며 경로에 따른 환경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아래는 쉘(Shwe) 광구에서부터 인도 콜카타까지의 가스 수송 경로를 예상한 것이다.

경로1_ 시트웨의 예차웅비(Yechaunbyi) 마을까지 수중 이동해 칼라단(Kaladan)강을 따라 아라칸(Arakan)주와 친(Chin)주를 지나 인도 미조람(Mizoram)주와 트리푸라(Tripura)주를 거치고, 라사히(Rajshahi)국경을 통과해 브라만바리아(Brahmanbaria)로 방글라데시에 들어가 콜카타로 연결한다. 약 290km 길이의 파이프 라인이 건설되며 약 10억 달러의 비용이 예상된다.

경로2_ 시트웨의 팔레차웅(Palechaung)마을까지 수중 이동해 아라칸주를 지나 방글라데시를 통과하여 콜카타로 연결한다. 약 10억달러의 비용이 예상된다.

경로3_ 쉘 광구에서 콜카타까지 수중이동. 예상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가격이 높은 대안으로 고려된다.

경로4_ 섭씨 영하 161도로 가스를 냉각해 액화시킨 후 액화천연가스(LNG)의 형태로 수송선을 이용해 아라칸 해안을 따라 서벵갈과 콜카타로 수송한다. LNG수송의 예상 비용은 30~50억 달러이다.

이밖에도 Volume Optimized Transport (Votrans : 가스를 액화시키지 않고 기체상태에서 압축해 수송하는 방식)기술을 이용해 압축천연가스(CNG)의 형태로 쉘 광구에서 콜카타로 수송하는 방식이 있다. 최근 미국기업 에나시트랜스포(EnerSea Transport LLC)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인도가스공사와 협력하고 있다. 예상비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출처 www.shwe.org

한국내 활동경과

- 2004년 6월 버마관련 해외회의 한국참가자를 통해 유노칼(1990년대 버마가스개발) 사례 국내에 소개
- 2004년 10월 '쉐 Shwe 대응 회의' 한국 참가 (국제민주연대)
- 2005년 4월 12일 '버마가스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워크숍 개최
- 2005년 4월 2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조승수의원(민노당) 관련 발언 -산자부 장관에게 사안 파악과 인권준수할 것 요구
- 2005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중 특별논의(special sitting)에서 한국노동계(민주노총) 관련발언
- 2005년 7월 버마 랑군과 아라칸 주 여행, 유노칼 희생자 인터뷰 지구인권리(Earthrights Internatioanl) 인턴 한국인 1인, 국제민주연대 1인
- 2005년 10월 14일 한국기업의 버마가스개발에 의한 버마인권침해 우려 표명 및인권존중 촉구를 위한 공동행동



아라칸 지역의 쉐 가스개발사업 반대 캠페인 (왼쪽 한국, 가운데 방글라데시, 오른쪽 인도)

버마 아라칸 사람들의 요구

No Way! No Shwe!

- 대우와 인도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인도석유공사
그리고 이들의 사업 파트너들은 버마군사정부인
SPDC(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국가평화발전위원회)와
쉐(Shwe) 가스 개발 계획에 협력함으로써
가혹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연루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개발의 이익은 군사정부의 군비로 사용되어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지역의 안보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다.
- 방글라데시와 인도, 특히 버마의 민중들은 이러한 위협으로
직접적이고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 아라칸의 천연가스 개발은
아라칸 주와 친 주의 주민들이 민주적인 선거로 얻은 정부를 통해
자신들의 천연 자원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가스개발지 아라칸에서는

■ 사진출처 ANC(Arakan National Council)

인권
침해

조옥 토(Kyut Taw 아라칸 지명)의 한 마을주인이 SPDC 군대에 의해 고문을 당했다. 그는 아라칸 내부 난민캠프(Arakan Internal Displaced Camps)로 탈출하였고 후에 의료 요원에게 치료를 받았다. (2004년)



Nu Nu Yi (23세)는 아라칸 주의 Down Khun 마을에서 SPDC 539 대대에 의해 강간과 고문을 당하였다. 그녀는 나중에 사망하였다. (2004년)



강제 노동



Ponagung Division의 Kren Khum과 Pann Ni-lar 마을 주민들이 인도로 향하는 고속도로(가스 송유관 경로가 될 수 있음) 공사 현장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2004년 4월)

사진출처 ANC



Moung Oo 소장이 이끄는 SPDC(버마군사평의회) 서부관할지역인 Ann Division의 Da-Luk Choung과 Rwar-thite 마을 주민들이 아라칸 주에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바위를 부수는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2004년 5월)



요 타 욱(Yo Ta Youk 아라칸 지명)의 농민들이 SPDC에 의해 몰수된 아라칸주의 경작지에서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 (2002년)

*아라칸 주의 지속적인 인권유린을 우려한 국제노동기구(ILO)는 2003년 5월 아라칸 주를 강제노동 폐지 우선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출처 Marwaan Macan-Markar, *Labour Body Could Crack the Whip on Junta*, *Inter Press Service*, Dec. 16, 2004.)

대우 가스개발의 현장, 버마 아라칸을 가다

한수진 _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아침 8시에 출발한 트럭은 오후 1시가 넘어 잠시 한 마을에 멈췄다. 식당에 들어가 차가운 음료를 주문했더니 주인은 난감한 얼굴로 아이스박스를 열어 보고는 얼음이 없다고 한다. 주변의 다른 상점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그 곳에서 차가운 음료를 찾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저녁 7~8시부터 2시간 정도만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는 곳. 이 곳은 버마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인도,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라칸 주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의 신문 경제면에는 버마 관련 기사가 종종 등장했는데 모두 한국 기업 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 가스 탐사 성공에 대한 내용이었다. 기업 주가는 크게 올랐고 정부는 상도 주었다. 국민들은 에너지 빈국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으며 기뻐했다. 그 가스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하지만 지난 7월 버마의 수도 랭군과 한국 기업이 가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아라칸 주를 2주 동안 여행하면서 만난 '개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개발이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었다. 여행 중 만났던 아라칸 출신 사람들이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 했던 것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었다. 바다에는 해산물이 가득하고 땅에는 석유와 천연 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태양과 물과 토양이 풍부한 곳. 그런데 이 풍요로운 속에서 운기가 없는 한 가지는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도로를 지나다 찍은 마을 사진. 랭군을 비롯한 버마 중심부를 제외하면 일반 주민들은 전통가옥에서 생활하고 있다.

직업이 없고 돈을 거의 벌지 못한다. 그나마 돈을 버는 사람들의 한달 평균 수입은 한국 돈으로 만원 정도이고 하급 공무원의 한 달 수입은 5천원을 넘지 못한다. 마을에 학교가 있어도 교과서와 초록색 룡지(룡지는 버마 전통의복으로 학생들은 초록색을 교복으로 입는다)를 살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골목마다 삼

삼오오 모여 있었다. 언덕 위에 오르면 기름진 눈이 눈 앞에 펼쳐지지만 마을 사람들은 쌀이 없어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

시트웨에서 만난 민(가명)은 "버마 해산물의 대부분이 아라칸에서 나오며 새우, 게, 해파리, 생선 등 해산물의 수출이 정부의 외화벌이에 한 몫을 한다"고 소개했다. 일반인의 낚시는 허용되지만 먼 바다에서 어업을 하려면 정부나 해당 구역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와 계약 맺은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 아라칸은 고급 목재로 쓰이는 티크 나무로도 유명한데, 버마 정부는 외화 벌이를 위해 티크 나무를 특별 관리하여 일반인의 벌목을 금지하고 있다.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도 독재 정권에게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은 자신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물론 그들의 생각을 듣기란 쉽지 않았다. 버마에서는 정부에 반하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버마 내의 모든 해외 투자는 정부와 계약을 맺어야 하므로 일반 버마인들에게 가스개발 문제는 기업의 경제 활동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였다. 때문에 사람들은 가스 개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꺼렸다. 한국 드라마와 기업 이름으로 대화를 시작해 가스개발에 대해 슬쩍 물어보면 그건 정치적인 질문이라며 대답을 거부하거나 우리 땅에서 가스를 개발하니 좋다거나 잘 모른다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정보국에 신고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입 조심은 그들의 일상이다. 그럼에도 몇몇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들은 지식인이나 지도자, 활동가로 소개된 사람들이었다. 이들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은 버마에 민주주의가 올 때까지 가스 개발을 멈추라는 것이었다. 해외 기업의 가스 개발로 인해 이익은커녕 고통만 더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먼저 이들은 가스 개발 계획이 정부와의 계약이라는 것에 주목한다. 윈(가명)은 "우리는 가스 개발 계획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호

주 기업이 군사 정부와 계약을 맺고 뱅갈 만에서 새우와 생선을 잡았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새우 번식지에서 어업을 하여 다음 해에 새우 어획량이 감소했다. 주민들은 정보가 없어 이런 일을 미리 막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가스 개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으며 지식인으로 소개된 사람들조차



므락 유 (Mrauk U)에서 만난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낮 시간에도 학교에 가지 않는다.

차도 기업과 정부의 계약 관계나 가스관의 경로 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미라(가명)는 "아라칸에서 가스개발을 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가스가 인도로 팔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버마 외부 신문에는 다 나오는 정보인데도 정작 지역주민인 이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들은 버마 정부가 아라칸 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가스 개발로 얻은 이익을 군부독재 정권의 유지를 위한 무기 구입과 군사력 증강에 사용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강제노동과 강제이주 그리고 군대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과 강간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당할 피해를 걱정하고 있었다. 버마에서 개발이 시작 되기 전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갑작스런 군인의 증가인데, 군인들은 개발 지역에 상주 하면서 기업에 안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강제노동과 강제이주를 지시하는 일을 맡는다. 최근 가스 탐사 인근 지역인 조옥 퓨(Kyauk Pyu)로 해군 사령부가 새로 옮겨 왔다. 조옥 퓨의 선착 장에는 바다로 나가지 않은 어선들과 함께 해군 함정이 정박해 있었고 주변에는 군인들이 많이 보였다. 조옥 퓨(Kyauk Pyu)의 선착장 근처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군인들과 자주 마주칠 수 있었다.

아웅(가명)은 "강제노동은 버마 전 지역에서 일어난다. 군대 시설을 짓는 데에 주민들은 공사 자재와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제노동은 군사 시설, 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 등 개발에 관련된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데 버마 정부는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봉사라고 둘러대거나 매우 적은 임금을 지불하기도 한다. 버마에서 강제노동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제노동은 5~6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나 임신부들을 제외하고 성별이나 나이와는 상관 없이 강요된다. 강제노동을 거부할 경우 감옥에 보내지거나 폭행을 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약 3000원의 벌금을 물기도 한다. 강제노동은 그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강



조옥 퓨(Kyauk Pyu)의 선착장 근처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군인들과 자주 마주칠 수 있었다.

제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인들의 폭력은 종종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한다.

일반적으로 해외투자를 이야기 할 때 지역의 이익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전기 공급의 제한으로 산업시설이 전무한 상태의 아라칸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기대 만으로도 큰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주민들은 이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들은 정부와 해외 투자 기업의 일 처리 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 모예(가명)는 "해외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런데 시트웨에 사무실이 생기더라도 직원들은 모두 랭군에서 뽑아 올 거예요"라고 말했다. 노아(가명)는 "가스 개발로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요식업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만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이들도 해외 투자를 통한 경제 개발로 매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하루 먹을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어쩌면 경제 발전이 독재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들은 그 모든 가능성들이 현재의 버마 정부와 지금까지 버마 안에서 행해졌던 방식의 기업 활동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이번 가스 개발과 비슷한 경우였던 미국 기업 유노칼의 야다나 가스 수송관 건설이 주민들에게 준 것은 강제이주, 강제노동, 폭력, 강간뿐이었다. 피해 주민을 증인으로 세운 인권·환경단체와 유노칼의 10년에 걸친 법정 소송 끝에 유노칼이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었지만, 수송관 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이제 수송관 관리의 임무를 맡아 또 다른 강제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정권 유지를 위한 외화 벌이에 혈안이 되어있는 버마 정부와 독재 정부의 보호 아래 싼 가격으로 자원을 얻으려는 기업의 합작품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스 개발이 아무런 반대나 장애물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버마 민중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 그들의 삶을 또 한번 흔들어 놓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활동이 야기한 인권침해나 환경파괴를 제재할 방법을 찾기 힘들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미 국내외 인권 환경단체들이 한국에서의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어떠한 관심을 보이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다. ■



도로에서는 손 연장으로 도로 보수 공사를 하는 이들을 200~300미터에 한번씩 볼 수 있었다.

위험받는 버마의 인권과 환경 : 야다나, 예타건, 그리고 쉘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

Carol Ransley _ ERI 활동가
(번역, 정리 최재훈)

1. 들어가며

야다나Yadana는 버마어로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 더 나아가 위대한 가치를 지닌 사람과 사물을 뜻한다. 야다나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은 그 뜻을 영원히 바꿔 놓았다. 이 다국적 에너지 프로젝트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야다나는 강제노동 및 심각한 인권침해와 동의어다.

야다나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쉘Shwe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버마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외투자 사업이었다. 버마에 대한 투자 유예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초국적 석유기업인 미국의 유노칼Unocal과 프랑스 토탈Total사는 '국가평화개발위원회SPDC' 라는 군부 정권 하의 버마에 대한 투자를 선택했는데, 이는 인권 및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개탄할만한 기록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이 기업들은 버마 군사정권에게 해당 프로젝트의 경비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갔다. 그에 따라 버마군대는 유노칼, 토탈 측과 맺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발생시켰다. 최근 한국의 대우 인터내셔널과 가스공사도 이와 똑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2. 야다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야다나(컨소시엄 파트너는 미국의 유노칼, 프랑스 토탈, 태국의 석유공사 Petroleum Authority, 미얀마 국영석유가스공사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와 예타건Yetagun(파트너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Petronas, 일본의 니혼 오일 Nippon Oil, 태국 석유공사와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공사)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각각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컨소시엄이 보유한 버마 내 파이프라인은 태국-버마 국경에서 만나 태국의 랏차부리Ratchaburi 공장까지 같은 파이프라인을 공유하며, 그 곳에서 태국 산업 발전에 쓰일 연료용 에너지로 처리된다.

두 파이프라인과 관련돼 일어난 침해 행위는 심각했다. 그리고 이후 야다나 프로젝트와 연관돼 일어난 침해가 미국에서 소송 대상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지구의 권리Earth Rights International (이하 ERI)'과 여러 인권단체들이 실시한 진상조사를 통해, 야다나 프로젝트가 시

작된 이래 파이프라인 경비병력에 의한 사법절차를 무시한 살인, 고문, 강간, 강탈과 같은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적인 인권침해에는 강제 노동과 짐을 강제로 운반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 파이프라인 경로를 감시하는 군인들의 무기와 보급품을 운반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또한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길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전에는 오지였던 이 지역에 군인들이 들어오자 불법적인 사냥, 벌목, 야생동물 거래 또한 늘어났다. 테나세람(Tenasserim) 지역은 동남아시아에 현존하는 최대의 열대우림지역 중 하나로, 야생 코끼리, 호랑이, 코뿔소, 큰코뿔새 등 희귀하고 중요한 종들의 서식지이며, 몽, 카렌, 타보안과 같은 수많은 토착민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들은 유노칼과 토탈이 데리고 온 군인들에 의해 일상적인 인권침해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의 부정적인 영향도 경험해왔다.

3. 유노칼 소송과 화해

ERI는 1995년부터 파이프라인이 건설된 지역 출신 14명의 원고들을 대표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우대 유노칼(Doe vs. Unocal)’ 사건으로 알려진 소송은 미국 법원이 해외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이유로 민간기업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버마에서 유노칼의 가스 파이프라인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들은 파이프라인 경로를 경비하던 버마군인들

에 의해 강제 이주, 강제 노동, 강간, 고문, 살인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엄청난 인권침해를 겪은 버마 농부들이다. 원고들의 변호인단에는 ERI 뿐만 아니라 폴 호프만(Paul Hoffman), 헌법권리센터(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 핫셀 & 스토머(Hadsell & Stomer), 주디스 브라운 초츠키(Judith Brown Chomsky) 등이 포함되었다.

1997년, LA의 미 연방 지방법원은 그 사건의 심리를 받아들이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해외불법행위청구법(Alien Tort Claims Act(ATCA))에 따라 기업과 경영진이 외국에서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위반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미 법원은 제소된 내용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고 결론지었다. 그러한 발표가 있는 지 3년 후, 원고들은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했다.

법원은 “유노칼이 강제노동이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암시하는 증거가 있고, 그런 행위로부터 (야다나 프로젝트의 공동투자자인 유노칼과 토탈이)이익을 얻었으며”, “원고에게 저질러진 폭력은 법원에 제출된 진술 조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군대의 침해 행위가 유노칼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그 사건을 기각했다. 원고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1994년 12월, 젊은 버마 여성 제인 도우 Jane Doe 1 는 2개월된 아기를 안고 요리를 하고 있었다. 버마 군인들이 그녀의 집에 찾아와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장에서 일하라는 명령을 받고 도망친 그녀의



제인도우리

남편을 찾았다. 군인들은 마을 전체를 강제로 이주시킨 후에도, 그녀는 지정된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은 사실에도 매우 화를 냈다. 군인들은 제인을 무자비하게 끌어챘고, 그녀는 팔에 아이를 안은 채 불위로 넘어졌다. 그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아기는 심한 화상을 입었다. 결국 아이는 화상으로 숨을 거두었다. 제인은 현재 버마 정부를 피해 도망쳐 난민이 되었고,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석유회사 유노칼을 상대로 한 역사적인 소송에 15명의 원고들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2002년 9월 18일, 미 제9 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유노칼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을 승인하였다. 세명의 판사단은 '유노칼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노칼이 버마 군대의 행위를 관리감독하였다는 사실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 판결하였다. 제9 순회법원은 유노칼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노칼이 군대를 의도적으로 지원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런 기준 하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재판을 재개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판단을 내렸다.

2003년 2월, 제9 순회법원은 7명의 판사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항소 내용을 재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법원의 이전 판결에서도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의 효력을 전

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유노칼은 자사의 사업 프로젝트가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고,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들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유노칼은 이전에 연방법원이 그 사건을 기각했다는 것은 버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미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지만, 주 법원은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주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청취하는 것은 미국의 대외 관계를 해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 연방 헌법 위반이란 유노칼의 주장도 각하되었다.

■ 해외에서의 인권침해로 기업을 법정에 세우다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의 결정으로 유노칼 소송은 미국 역사상 기업이 해외에서 범한 인권침해 행위 때문에 재판정에 서게 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빅토리아 채니(Victoria Chaney) 판사는 결정문에서 유노칼이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유노칼 소송이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유노칼의 공동투자사업에 군대가 고용되었고, 따라서 유노칼이 군대를 대신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이끌만한 증거를 찾아냈다. 채니 판사는 원고들의 살인, 강간, 강제노동 주장에 대한 배심재판 날짜를 2005년 6월로 정했다.

■ 역사적인 화해

2005년 3월, 유노칼이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동의함으로써 그 소송을 마감하는 역사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 배상금은 버마 정권을 피해 숨어사는 가난한 주민들에게 지불되어 지역민들의 생활 조건, 의료, 교육을 개선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권리를 보호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화해 결정으로 두 그룹의 원고인단이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기한 일련의 소송은 끝이 났다. 역사적인 두 소송인 ‘도우 vs. 유노칼 Doe vs. Unocal’ 과 ‘로우 vs. 유노칼 Roe vs. Unocal’ 사건은 이제 종료되었다.

소송을 제기했던 15명은 유노칼이 공모했던 버마 군대의 행위에 의해 무시무시한 고초를 겪었다. 그들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8년 간 자신들의 모든 삶을 바쳤다. 머나먼 땅에서 야만적인 독재 하에 살던 소수민족 출신의 주민들이 미국의 거대 다국적 석유회사를 법정에서 세워 끝내 승리했다. 주민들의 용기는 많은 감동을 주었고, 우리는 화해 결정으로 야다나 파이프라인의 희생자들을 도울 기금을 마련하게 된 데 만족한다.

이번 화해 결정은 인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동에 있어 역사적인 승리였다.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인권침해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전세계 기업들에게 큰 반향을 가져올 것이며, 기업의 잘못된 행위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4. 쉘 가스 파이프라인: 또다른 야다나?

그러나, 슬프게도 또다른 야다나가 진

행 중에 있다. 2004년 1월, 한국과 인도회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버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 버마 서부 해안의 벵갈만에서 광대한 천연가스전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버마어로 “황금” 을 뜻하는 쉘Shwe로 알려진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계획 단계이다. ERI가 보기에 야다나 파이프라인과 현재 예정된 쉘 파이프라인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아주 많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버마 전역에서 강제노동과 인권침해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이러한 침해 행위들이 주요 개발계획 예정지에서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쉘 프로젝트와

야다나-에타건 파이프라인 비교

이 글에서는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경우 실제 지구의 권리Earth Rights가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여기에는 대규모 추출산업 개발과 직접 연관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가 포함되는데, 특히 비정부기구의 힘이 미약하고 법적인 구제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무척 어려운 나라에서 발생한다. 안타깝게도 버마가 바로 그런 나라다. 수십 년 간의 잘못된 국정운영, 부정부패, 무력충돌, 고립은 버마를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잘못 운영되는 나라들 중 하나로 바꿔 놓았다.

쉘 파이프 라인 추진과정에서 야다나-에타건 파이프라인 때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투명성이 부족하다. 주민들

의 참여와 독립적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를 아예 배제한 것이다.

버마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버마 국가평화개발위원회SPDC는 자국의 천연자원을 팔아 치워 벌어들이는 외화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SPDC는 이권을 팔아 얻은 막대한 이익을 자국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기보다는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국 군대에 게 공급할 무기와 군수품을 사는데 쓰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야다나-에 타건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서 발생했던 침해 행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 인권에 대해 우려되는 점들

특히,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 버마 군에 의한 강제노동이 계속되고 점차 확산된다는 사실은 ERI와 여러 인권단체들에 의해 잘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SPDC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1990년대 동안 전국적으로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자발적인 노동”을 해왔다고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버마군에 의해 1996년부터 1998년 사이 야다나-에 타건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되풀이해서 강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에는 파이프라인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아무런 보상 없이 강제로 이주된 약 36,000명의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강간, 고문, 약식처형 같은 인권침해 피해자들도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다.

가장 문제의 소지가 큰 점은, 미국 항소 법원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관련된

유명한 에너지 기업들인 유노칼과 토탈이 이런 침해 행위들을 ‘방조’한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그러한 침해 행위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ERI가 최근 수집한 증언에 따르면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경로를 정비하기 위해 고용된 Tatmadaw 부대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돈을 강탈하고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한다. 주민들은 기업이 이러한 인권침해 발생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봤을 때, 버마 서쪽 해안을 따라 거주하는 아라칸과 친 주의 주민들은 당연히 쉐 프로젝트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SPDC의 군사작전은 버마족이 아닌 소수민족들, 특히 로힝자 Rohingya와 친Chin족이 거주하는 버마 서부지역에서 특히 가혹했다. 로힝자는 대부분 무슬림들이고, 친족의 90%는 기독교인들이다. 둘 다 종교적인 이유로 국가의 박해를 경험해왔고, 이 때문에 미국 무부가 버마를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특별 관심 국가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군사 정부의 차별정책과 1970년대 말에 처음 시작된 반란진압 작전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수반하였다.

■ 환경에 대해 우려되는 점들

쉐 파이프라인의 최종 경로는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예상으로는 아라칸 북쪽을 통해 미조람Mizoram까지 간 후, 트리푸라Tripura를 경유하여 인도 벵갈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되는 경로들 중 네 번째를 제

외하고는 모두 몇 개의 매우 민감한 생태지대를 가로질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나가-마누푸리-친 구릉지대 the Naga-Manupuri-Chin Hills를 들 수 있겠다. 그 지역에는 북부 삼각형의 아열대 삼림, 미조람-마니푸르-카친 열대 다운림, 친 구릉지대-아라칸 요마 저산대 삼림, 메갈라야 아열대 삼림, 북동 인도-미얀마 소나무 삼림과 같이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곳들이 포함되어 있다.

야다나-예타건 파이프라인이 위치한 카야-카렌 저산대 지역 Kayah-Karen Montane Region과 같이 나가-마누푸리-친 구릉지대는 아주 높은 수준의 생물학적 종 다양성 때문에 세계 200대 생태지역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특히 수많은 종의 조류가 살기로 유명한 그 지역은 멸종 위험에 처한 홀록 긴팔원숭이 Hoolock gibbons, 들소 gaurs, 짧은꼬리곰원숭이 bear macaques, 호랑이, 코끼리 코뿔소와 같은 수십 가지 종의 동물들에게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다.

나가-마누푸리-친 구릉지대를 뒤덮고 있는 습한 삼림지대는 약 272,000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버마, 방글라데시, 인도 세 나라의 국경에 걸쳐져 있다. 아라칸 요마 산맥 Arakan Yoma Mountain Range은 그 지역을 둘로 나누면서 세 나라 국민들 수천만 명이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브라마푸트라 Brahmaputra와 이라와디 Irrawaddy강 유역의 아주 중요한 수원이다. 삼림이 덮고 있는 상당 부분은 현재까지는 손상되지 않고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지만, 그 지역은 또한 삼림의 0.8%만이 보호를 받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훼손되기 쉬운 10대 생태지역 중 하

나로 이름이 올라 있다.

나가-마누푸리-친 구릉지대의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운작, 인구 증가, 사냥, 합법/불법적인 삼림 자원 거래, 농업, 벌목,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서식지 손실 등이 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쉐 파이프 라인 프로젝트 건설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게다가, 도로 건설은 합법적, 불법적 형태의 국경간 무역거래를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다.

쉐 프로젝트에 의한 개간, 시추, 건설은 최종 경로가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칠 것이다. 서식지 파괴, 사고로 인한 유출, 유해한 독성 폐기물의 발생은 이런 형태의 자원 추출 산업에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더구나, 쉐 프로젝트는 더욱 특별한 위험 하나를 더 안고 있다. 벵갈만은 4월부터 6월,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강력한 사이클론이 발생한다. 강한 바람, 폭풍우, 해안지대의 홍수로 파이프라인이 심하게 피해를 입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군사정권과의 협력은 이제 그만 하셈 !



조사란 _ NLD 한국지부 대외협력국장

NLD 한국지부는 1999년부터 매달 한 차례씩 버마 대사관 앞 시위, 정치 양심 수 사진 전시회와 석방요구 서명운동을 벌여 왔고, 각종 강연, 언론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군사독재 치하의 버마의 현실을 알리는 동시에 한국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요청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부와 국회가 버마의 군부독재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도록 압력을 넣는 활동, 예를 들면 매주 목요일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나 NLD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의회를 방문하게 하는 등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 중단하고, 대신 버마의 민주주의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독(毒)나무에 물을 주지 마라” 는 버마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이 단지 경제적인 이윤을 위해 버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분명 독나무인 군사독재를 정당화 시켜 주는 것이고, 이는 버마의 민주화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버마의 민주주의 지지 요구를 외면하면서 오히려 군사독재와의 협력적 투자를 더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매년 약 2억 달러 가량을 버마에 수출하고 있으며, 올 해 9월 현재 수출액은 이미 작년 수출액에 육박하는 1억 9천 2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10억원 이상을 버마정권에게 지원하고 있고, 버마 군이 사

NLD(버마민족민주동맹 National League for Deomcracy) : 1988년 8월 8일의 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열기에 부응하여 결성된 정당. 아웅 산 수지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NLD 는 1990년 총선에서 83%의 지지를 받았으나 군사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정권에서 물러나 지 않았다. NLD 해외 지부의 한국 지부 홈페이지 www.nldla.or.kr

용할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인 대우는 버마에 무기 생산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버마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배신과 도전입니다. 우리는 투자 자체를 반대하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의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정권 아래에서 투자를 통한 혜택은 절대 국민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군부의 장성급들이나 친독재 세력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군사독재 권력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여기서 오늘날의 버마가 처한 현실을 잠깐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버마 군부는 정치문제에 대해 버마의 국내외 민주세력들과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무력으로 반대세력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버마에는 정치적 수감자가 1,500명 정도 있는데 이미 100명 이상이 구타, 고문 등으로 사망했습니다(출처 www.aappb.org). 국경지역이나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강제노동, 강제이주가 일상화되어 있고, 버마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곧 마을들이 불태워집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되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버마 군인들에게 성폭행당한 산족 여성만 해도 627명에 달합니다. 이 통계는 단지 산족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폭행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버마 전체를 통틀어 이러한 피해를 당한 여성의 수가 최소 수 천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출처 License to Rape, www.shanwomen.org)

또한 무장저항세력과 관련됐을지 모른다는 의혹만으로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여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를 잃은 많은 아이들이 국경지대의 난민촌으로 들어가거나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군대에 끌려가는 경우도 많아 현재 버마의 아동병사 숫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반면, 버마 최고 권력자인 탄 슈웨 총사령관의 손자는 매일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의 사립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많은 버마의 아이들이 학교는커녕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소수 기득권층의 자녀들은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버마에 투자하는 것은 군부독재 세력에 산삼을 갖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대우인터내셔널의 가스개발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사업으로 인한 혜택은 그 지역에 사는 아라칸족이나 버마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군부독재 세력과 한국 기업만 이득을 볼 뿐입니다. 외국기업의 투자가 인권유린과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로 인한 파급효과는 정치적 수감자 증가, 강제 노동, 강제 이주, 성폭행 등의 인권유린과 내전의 장기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버마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버마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버마의 민주화 세력을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그래도 한국이 버마에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버마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한국돈으로 15,000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이익은 친군부 세력에게만 돌아가고 맙니다.

2003년 5월 30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지방순회 연설을 하던 중 데파인 지역에서 군부가 동원한 폭력배들에게 공격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수지 여사를 보호하려던 많은 당원들과 학생들이 부상당하고 270명 가량이 살해되었으며, NLD 의장인 우 틴우와 사무총장 아웅산 수지 여사는 가까스로 목숨은 구했으나 부상을 당한 후 가택연금 되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한국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2006년 버마가 아세안(ASEAN) 의장국이 되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을 때도 한국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뒤쳐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조차 버마 민주화를 위한 모임이 국회 내에 조직되어 있고, 버마의 의장국 승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말입니다(결국 국제적인 반대여론에 밀려 7월 26일 버마군부는 의장국을 자진해서 포기했음). 그 가장 큰 이유가 한국이 버마 군부와 경제적인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올 3월 11일 NLD 당원 9명의 난민지위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버마와 같이 오랜 군사독재로 고통을 겪을 때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해외의 양심세력으로부터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받았던 한국이 오늘날 버마인들의 민주화를 위한 열망과 투쟁을 외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것이 다 경제적 파트너인 버마 군부정권을 의식해서가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버마에 대한 현재까지의 한국정부의 정책은 군부 정권과의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마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라는 벽이 막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군사독재를 극복한 나라로서 한국이 버마의 상황에 대해 동정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한국정부가 여태까지 투자를 통해 버마의 군사정권과 동업자 관계를 맺어온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다른 길로 가야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990년 실시된 총선거 결과에 따라 NLD 정당을 지지해 달라, 버마의 민주화를 지지해 달라, 버마 문제를 지속적으로 도와 줄 수 있도록 국회 내의 모임을 조직해 달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내 버마 민주화 인사들의 외침입니다. ■

군사정권 하의 버마인들의 삶

■ 사진출처 earthrights

강제
이주



마을 사람들은
군인들의 명령이 떨어지면
가능한 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한다.



강제 이주된 마을 사람들은
순찰하는 군인들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피난처를 만들었다.



이 여성은 군인에 의한 강제이주 후
살길이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마을 사람 몇몇이
그녀를 돕기 위해 돌아왔다.



멀리서도 군인들이 마을에 불을 지른 것이 보인다.



군인들은 마을 주민들이 추수하여 저장해둔 쌀을 태웠다.

한 가족이
남은 음식이나 가재도구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미 재가 된 집터에 돌아왔다.





군인들은 체력이 떨어지거나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포터(porter-군수품과 군인들을 위한 음식 등을 나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땅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사진출처 eartrights





강제로 짐을 나르는 동안 생긴 상처.
많은 포터들이 이와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다.

버마의 민주화와 외국인투자, 그리고 한국



박은홍 _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부소장

버마 군사정권 ‘자력갱생모델’ 의 실패

버마에서의 개발주의는 계획합리적 국가가 아닌 계획이데올로기적 국가(plan-ideological state)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비착취적 사회주의의 계획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발전전략모델에서 시장은 국가에 의해 지도되기 보다는 배제되었다. 1962년부터 버마 군사평의회는 ‘버마식 사회주의’(Burmese Way to Socialism) 기치 하에 10년 동안 자급자족경제를 도입했고 대부분의 민간기업을 국유화하였다. 이로써 버마는 세계경제와의 완벽한 단절, 즉 자력갱생모델(autarky)을 시도한 몇 안되는 국가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통제경제를 기조로 한 수입대체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문을 닫아 걸었다.

그러나 사기업집단을 제거하자 대신 암시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군사평의회는 노동자, 농민들에게 복지를 약속하였지만 하향 평준화로 그쳤다. 암시장에 참여한 경제 행위자들만이 이득을 챙겼다. 군사정부는 심각한 물자 부족과 암시장 확산을 막기 위해 1987년 9월 농산물의 거래를 일부 자유화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부유층과 투기꾼의 이익만 보장하였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던 특정 화폐의 유통금지 조치를 내림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버마 군사정부는 UN에 버마를 외채 조정을 포함하여 최우선 원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빈국(LLDC)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해 12월 UN은 요청을 정식으로 받아들였다. 이 사실이 1988년 3월 국회적인 인민의회를 통해서 알려지자 국민들의 실망감은 극도에 달했다. 국민경제의 파탄은 1988년 8월 8일 이른바 ‘8888 민주항쟁’의 배경이 되었다.

‘개발독재모델’로의 전환

1988년 9월 새로운 군부집단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평의회에 해당하는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SLORC)를 설치하였다. 신군부는 과거의 사회주의성향으로부터 탈피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내부지향적 경제를 외부지향적 경제로 바꾸어나갈 목적으로 ‘대외개방’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1988년 11월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관리하는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가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책임졌다. 1989년 국명도 버마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서 미얀마연방으로 바꾸었다. 이로써 버마는 국가-토착민간자본-외국인자본으로 이루어지는 3각동맹을 기조로 하는 동남아시아 발전국가모델 모방에 들어갔다.

‘버마식 사회주의’의 종결과 함께 버마는 약한 수준에서 호황을 경험하였다. 이는 도로, 다리 신축, 목재수출, 부동산가격 상승 등과 관련이 있었다. 1992년 관개시설 개선으로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생산기법이 다양화되면서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경기는 다시 후퇴하였다. 정부는 경제개방과 시장자유화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군부, 소수 상업자본과 관련을 맺은 일부만이 그 혜택을 보았다.

현재 버마 군사정부는 외화 조달을 위한 방책으로 주로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여 농업생산 증대를 통한 수출 증대, 산림개발 및 동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광산물, 수공업품 등의 수출 확대, 석유 및 가스개발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개발독재론에 기대고 있다. 특히 한때 인도네시아 경제를 부흥시켰던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시기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버마 군사정부는 수하르토 군사정부가 장기독재를 위해 만들어낸 정당인 골카르(Golkar)와 유사한 관제민간기구인 통일연대개발협의회(USDA)를 조직하여 전국단위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악의 인권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버마에 대한 미국, EU 등의 경제제재조치는 버마 군사정부가 목표로 하는 발전국가로 진입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그나마 싱가포르,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교류가 이들의 개발주의를 지탱해주고 있다. 이 중 일본은 명시적으로는 특정 국가권력에 대한 해외원조는 그들의 인권개선 정도와 연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인권외교는 주목할 수준은 아니다.

버마에 대한 투자는 윤리성 포기하는 행위

여기에도가 버마 군사정부는 ‘발전적’ 이기 보다는 ‘약탈적’ 이다. 국가는 자율적이기보다는 이익집단으로서의 군부에 포획되어 있다. 여전히 사회는 군사화되어 있다. 발전국가의 성립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외국인 투자의 유입은 정치적 개방을 유도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버마 군사정부는 관료주의, 비밀주의가 팽배하며, 조령모개식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투자기업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관료구조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경직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사정부의 경제관리능력의 취약성은 정부공식 환율이 시장환율에 비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는 현실에서도 드러난다.

민주주의의 성숙 정도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규율 정도에 비례한다. 아시아지역에서 국가와 시장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높은 규율능력을 갖고 있다. 이제 국제연대 맥락에서 한국 시민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최빈국이자 국가폭력이 무방비 상태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버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접근과 한국기업의 윤리적 투자를 촉구하고 그 실행 여부를 감시하고 고발해야 한다. ■

참여 단체

노동인권회관 <http://www.inkwon.or.kr/>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303-2 한성빌딩 401호 (우)140-011/
전화 (02)749-6052/8975 팩스 (02)749-6055

나와우리 <http://www.nawauri.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2가 169-1 4F
전화 02-747-3194 팩스 02-747-3195

민주노동당 <http://www.kdnp.or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4층
전화 (02)761-1333 팩스 (02) 761-4115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2층
전화 (02)2670-9100 팩스 (02)2635-1134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http://minbyun.jinbo.net/>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http://www.khis.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32번지 2층
전화 (02) 3675-5808 팩스 (02) 3673-5627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02)723-5300 팩스 (02)723-5055

피난처 <http://pnan.org/>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81-26 (201호)
전화 0505-211-4119 팩스 0505-211-5119

한국노총 <http://www.fktu.or.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전화 (02)6277-0000 팩스 (02)6277-0077

함께하는시민행동 <http://www.action.or.kr/>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번지 시민공간여울 2층
전화 (02)921-4709 팩스 (02)6280-7473